

차꽃과 빛의 놀이터 ... 보성차밭 빛축제



제17회 보성차밭 빛축제 개막을 하루 앞두고 28일 오후 보성읍 봉산리 한국차문화공원에 마련된 빛조형물이 환하게 빛을 밝히고 있다. 29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Tea Light! Delight!'를 주제로 보성 차밭 빛축제가 열린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6.5m 크기의 버블트리와 특수 제작된 3D 상설리미가 선보이고 1만송이 LED 차꽃과 빛의 놀이터, 네온 아트, LED 숲 등이 연출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혈세 110억 맥쿼리에 부당 지급

감사원 감사 결과 ... 사업자에 법인세 이중지급 등 배경 의문
 2016년 2순환도로 1구간 변경협약 사업자에 유리한 조항 동의

광주일보 지적 사실로 드러나

지난 2016년 말 민선 6기 광주시와 맥쿼리 간 체결한 제2순환도로 제1구간 변경협약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지적(광주일보 2018년 12월 3일 ~ 2019년 3월 5일 보도)이 사실로 드러났다. 광주시가 협약을 변경 체결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조항에 동의해 110억원이 넘는 혈세를 넘겨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것이다.

변경협약으로 오히려 광주시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15일간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협약 내용의 수정, 사업자 이익의 광주시로의 귀속을 포함한

합리적인 정산 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광주시에게 요구했다. 이에 따라 3년 전 협약 변경으로 실제로 시의 지원금이 절감되는지 여부,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협약을 왜곡 변경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8일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16년 12월 16일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인 (주)광주순환도로투자(맥쿼리 100% 투자)와 2004년 10월 작성한 협약을 변경하면서 운영 방식을 최순영수입보장방식(MRG)에서 투자비보전방식(MCC)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법인세가 쟁점이 됐다. 기존 MRG 방식에서는 민간사업자에게 시

가 법인세 비용을 보전해줬으나, MCC 방식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이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법인세 증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그 70%만 정산하는 것에 동의해 2017년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112억원, 2018년 중간예납 법인세 14억원 등을 모두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준 뒤 각각 93억원, 7억원 등 100억원의 환급금을 돌려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법인세 등의 환급액에 대해 70%만 정산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변경실시협약을 잘못 해석한 것이며, 불리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시가 2015년 소송 결과 등에 대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법인세 환급액 70%만 돌려받은 것에 동의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6년 법인세의 경우 시가 MRG 적용으로 이미 법인세를 보전해줬으나 민간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다시 18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시는 118억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겨주고 지난 5월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까지 방치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감사원 감사는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부분에만 한정됐으며, 협약 자체에 대한 문제점까지 들여다보지는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 협약은 오는 2028년까지 장기기간에 걸친 내용으로,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 민간사업자들의 전략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기업의 법인세를 시가 부담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협약 변경의 귀책 사유가 맥쿼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발생한 거액의 법인세까지 물어주는 등 그 배정도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서울 16개 대학 정시 40%로 확대

교육부, 2023학년도까지 ... 학종 평가 기준 의무 공개

광주 교육단체 "우려스럽다"

정부가 2023학년도까지 서울 주요 상위권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 이상 확대한다. 불공정 논란을 빚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 기준도 대학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관련기사 7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확대를 언급한 이후 38일 만이다.

우선 교육부는 학종과 논술위주전형 모집인원이 전체의 45% 이상으로 높은 서울 16개 대학에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정시 전형을 40% 이상 끌어올리라고 권고했다. 해당 대학은 서울대와 연세대·고려대를 비롯해 ▲건국대 ▲경희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다.

교육부는 또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으로 대입 전형을 단순화해 는

솔고사에 기반을 둔 전형이나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도 폐지하도록 유도한다. 중장기적으로 대입 체계를 전면 개편해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2028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수능체계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부모 배경이나 사교육 등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할 수 있도록 대입 전형자료의 공정성도 강화한다.

정시 확대 방침에 광주시교육청과 교육단체는 우려를 표하며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시교육청과 광주교사노조는 "생기부 공정·투명성 강화에 대한 노력에는 공감하지만 지방 학생들의 수시 진학 비율이 높은 현실을 고려하면 정시 비율 확대는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교육청은 입시 전형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강화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수업, 평가 지원단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진로 진학지원단 정시 지원 프로그램 구축, 온·오프라인 진학 상담 시스템 상설 운영, EBS와 협업 강화 등에도 힘쓰기로 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 전역 아파트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을"

시, 주택보증공사에 요청
 재개발·재건축 활발한
 동구·북구까지 확대해야

광주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동구와 북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 7월 서구·남구·광산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광주시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광주 전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건설사 분양보증을 심사할 때, 분양가를 인근 지역에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으면 같은 수준으로, 1년 초과는 105%를 넘을 경우 보증을 거절할 수 있어 해당지역 분양가의 조정 효과가 있다.

지난 7월 광주시는 광주 전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 요청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구, 남구, 광산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동구, 북구 지역은 제외한 바 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후 서구, 남구, 광산구 지역의 분양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동구, 북구 지역은 분양가 규제 장치 부재로 조원원분양가 대비 일반분양가가 큰 차이를 보이는 등 고분양가를 부추기고 있어 추가로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한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전체 33곳 가운데 24곳이 동구, 북구에서 이뤄지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조순대, 총장 논란 끝 정상화 속도 ▶6면
 책 세상 - 조선 직장인 열전 ▶14·15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전라남도 JeollaNamdo

검색창에 **남도장터** 검색

www.jnmall.kr

친환경쇼핑 남도장터

전남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전국 1위

전남은 국내유일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

전남은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 1번지

'남도장터'는 전남의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한곳에서 살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전라남도 인터넷 쇼핑몰 남도장터